

---

**정책 정보**

## 기업 구조조정 관련 협력업체 지원 방안

- (정책 배경)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 수급 대책을 중심으로 한 협력 업체 지원 정책을 발표함
  - 11월 3일의 신용평가 결과 청산·법정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관련된 협력 업체는 총 3,000여 개로 추정되며, 업체당 부실기업 어음을 3~50억 원 정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  - 최근 부도 처리된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는 1차 하청업체 504개를 포함해 총 3,565개로 파악되었고, 이들은 대우자동차에 대해 총 2조 1,000억 원 정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
- (주요 정책 내용) 1차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2·3차 협력업체의 연쇄적인 자금 수급 안정화를 유도
  - 경영안정자금(가용 자금 600억 원)을 우선적으로 활용
  - 신용보증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한도 확대; 2억 원 → 4억 원
  - 법정관리 신청 기업의 경우, 채권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기발행 어음 및 물품 대금과 직접 관련된 매입 채무를 일정 조건(예: 연 4회 분할 지급)의 新어음으로 교환하거나 신규 어음 발행을 신속히 추진
- (평가) 일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협조가 가능할지 의문이며,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금결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
  - 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한 주요한 정부 정책은 채권 금융 기관 등 일선 금융 기관에게 협력업체 지원을 권고하는 수준임.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업체 지원에 나설 여력이 있을 지는 의문임
  - 자금 수급에 의한 연쇄부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음 위주의 대금결제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할 것임

(정반석 연구위원 [bsjaung@hri.co.kr](mailto:bsjaung@hri.co.kr) ☎ 3669-4045)

최근 주요 정책(2000. 11. 01 ~ 11. 12)

증권·보험·금고 감독규정 개정	금융감독 위원회 (11.11)	- (목적) 금융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정비 - (주요 내용)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증권사·보험사·신용금고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기한을 금감위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함
기업간전자상거래 (B2B) 지원 확충	산업자원부 (11.11)	-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산업의 e-비즈니스 기반 확충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B2B 모델 개발 적극 지원 - (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) 국내 B2B 기반 확충, 중소기업의 e-비즈니스 역량 강화, 제조업의 IT 인력 확충
우리나라 멀티미 디어 기술 국제 표준화	산업자원부 (11.08)	-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멀티미디어 기술표준 국제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22종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 - (주요 채택 기술) 차세대 동영상 휴대폰, 대화형 멀티미디어 방송용 MPEG-4 및 MPEG-7 부분의 22종 기술
위성영상 정보 시스템 구축	정보통신부 (11.08)	-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서울과 부산의 상세한 지리 정보 제공 -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보 생산체계와 지리 정보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 위성정보의 생산·유통·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
2차 기업구조조정 후속대책 논의	금융감독원 (11.05)	-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주요 당부 내용 · 일시적 유동성 문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· 회생가능 기업에게 출자 전환할 경우 반드시 경영권 교체,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도 자구계획 이행 약정에 포함 · 정리대상 기업은 조속히 정리·매각·합병 등 시행 · 정리대상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· 총 신용공여 500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위험 평가·정리·부실기업 정리 제도화
한·일 투자촉진 협의회 개최	산업자원부 (11.03)	- 전자상거래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적극 추진 합의 · 한·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조기 구성 · 무역 EDI 시스템간 상호 접속으로 서류없는 무역 실현 추진 · 조선, 철강, 섬유 등 산업별 전자상거래 모델 사업 추진, 중소기업형 e-Marketplace의 설치 등을 협력 과제로 검토 · 한국의 eTrust 마크와 일본의 온라인 마크간 상호 인정 등 안전한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에 노력
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 방안	정부 (11.03)	- (목적)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위축 등의 문제점 최소화 - 주요 내용 · (금융 분야) 협력업체 특례보증 실시,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 등 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방안 강구 · (건설 분야) 수익성 있는 해외공사 별도 관리, 공사 수행을 위한 유동성 지원, 하도급·납품업체 피해 방지 등 주요 국내외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 지원 · (고용 분야) 종업원 임금 및 퇴직금 보호, 노사분규 예방, 재취업 촉진 및 생계 안정 지원 등 고용 불안 최소화